

‘위키유출’(Wikileaks)이 “폭로”한 대중간첩시대의 정보정치

0. 누가 간첩인가

국제 간첩 사건 때문에 난리다. 한쪽에선 전직 해커이자 기자였던 자가 간첩으로 내몰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자가 가지고 있던 문서에서 외교관들이 간첩 활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누가 간첩인가? 미 법무부는 내부고발을 지원하는 전문 웹사이트 ‘위키유출’(Wikileaks.org)의 편집장이자 대변인인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가 미 정부의 기밀 문서를 대중에 폭로한 일이 군사 비밀의 공개를 중대 범죄로 보는 간첩법(Espionage Act of 1917)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간첩도 한 정부가 그 시민을 상대로 무슨 짓을 해왔는지 폭로하면서 간첩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¹ 그가 간첩이라는 주장에 우리는 선뜻 동의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어떤 테러 계획과 연관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테러리스트’이고, 특정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한 것 같지 않지만 그들은 ‘조국을 배반’한 것이고, 아직 불법 행위는 없더라도 그들은 ‘범죄 음모’에 관여한 것”² 이란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그 폭로된 문서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유출은 아니”라는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에 따르면, 적어도 2차대전 이후 각국 정상이 서로 전화하고 바로 날라가 같이 저녁 먹을 수 있게 된 다음부터 외교관은 가끔의 인사치레를 빼면 주로 간첩 활동을 해왔다.³ 아닌 게 아니라 미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외교관들이 유엔 최고위급 인사들의 신용카드 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와 팩스, 무선호출기, 자주 이용하는 항공편과 마일리지, 심지어 일부 아프리카 국가 고위인사의 유전자 정보와 지문 및 홍채 인식정보까지 수집했다는 것을 보면 간첩 활동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어산지도 간첩으로 몰리고 외교관도 간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잠재적으로 간첩 활동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듯 하다. 사실 위키유출 사태는 누가 간첩인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따지면 되는 문제라기보다 왜 모두가 잠재적인 내부고발자가 되고 있고 어떻게 위키유출과 같은 대량의 비밀 정보 유출이 가능해졌는지를 묻는 사건일 것이다. 그런데도 어산지가 간첩인지 영웅인지, 위키유출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 혁명의 언론인지의 논란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주류 언론의 태도는 위키유출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전후 맥락과 의의를 두루 살피기보다 마치 몇몇의 개인이 문제라는 식이다. 그러고 보면 위키유출의 폭로 방식도 권력의 문제를 마치 부패한 권력자들의 문제로만 보도만 만드는 듯 하다. 그래서 이 글은 위키유출의 대량 기밀 폭로와 같은 일이 가능해진 세계의 변화상을 추적해 보고, 위키유출이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해킹행동주의(hacktivism)와 어산지가 말한 “과학적 언론”의 맥락에서 따져볼 것이다. 그러면서 위키유출이 기획하고 감행한 정보정치의 여러 한계를 짚어보고 그와 동시에 촉발시킨 보다 급진적인 정보정치의 잠재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1 Bruce Sterling, “[The Blast Shack](#),” Webstock, 2010.12.22

2 Michael I. Niman, “[Wikileaks and the End of Democracy](#),” Artvoice, 2010.12.15

3 Umberto Eco, “[Not such wicked leaks](#),” Libération, 2010. 12.2

1. 대중간첩시대, 모든 딱딱한 정보는 흘러내린다

간첩처럼 보이는 것은 외교관만이 아니다. 도덕적 명분없는 전쟁터에서, 언제 일회용 노동자 처지로 몰락할 지 모르는 직장에서, 조직이나 공동체를 위해 괜한 희생하지 말고 자기계발 노력에나 경주하라는 명령이 울려 퍼지는 소비생활에서, 기밀 유지와 통신 보안의 조직적 긴장은 예전같지 않다. 이는 누군가의 도덕적 해이 같은 것이 아니라 지식기반경제와 정보자본주의가 유도하는 문화가 그러하다.

자본주의적 정보 생산을 위해서 자본은 노동자의 인지적 능력과 지적 숙련에 더없이 의존하게 되는데 그 창조 활동이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노동자의 자율적 지성과 감성까지 통제한다. 자본은 노동자의 머리와 몸에서 그들이 생산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억지로 떼내어 상품화하고 사유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 노동과정에서 통제와 폭력이 더욱 강력적으로 된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정보·지식 노동자가 잠재적인 ‘산업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내부 정보 유출자를 키우는 불안정한 삶의 조건과 조직 문화가 형성된다. 심지어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기술유출범으로 누명을 쓸 수 있다.⁴ 정보의 유통과 소비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정보는 그 복제를 위한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자원인데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되도록 희소한 재화인양 포장된다. 또, 정보의 속성상 개인 금고 안에 넣어둔 정보란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어느 정도 공유되어 이용된다. 하지만 그것은 또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화폐와 교환될 상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통제하에 그래야 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그 생산하는 신체와 떼어내고 통제해야지만 자본 축적이 가능하고, 상품이 되기 힘들지만 상품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정보상품의 모순 때문에 정보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정보는 유출된다. 그래서 또한 정보자본주의사회는 사유재산이자 상품으로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소비하는 영역 모두에서 검열과 감시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그에 따라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되고 간첩으로 내몰리는 것은 정보·지식 노동자만이 아니고, 유출되는 정보는 국부(나 국가안보)로 취급되는 첨단기술이나 산업비밀만이 아니다. 문화산업과 지식산업의 거의 모든 정보상품은 더욱 빈번히 유출되고 있다. 누구나 쉽고 값싸게 참여하는 복사하기-붙여넣기의 정보복제 문화가 급속히 퍼진만큼 음악, 책, 사진, 영화, 게임 등의 정보상품은 피투피(p2p) 파일공유를 통해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다. 내부고발이나 산업비밀의 유출을 막자는 영업비밀보호법 등이 정보·지식노동자를 불철주야 감시하듯이,⁵ 이 고삐 풀린 정보상품의 유통과 소비문화를 통제하기 위해 강화된 법제도는 인터넷의 거의 모든 이용자를 불법복제를 일삼는 잠재적 절도범으로 전제한 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말했듯이 정보상품의 이용을 너무 통제만 해서 그 사용가치를 아예 잃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놓는 예의 그 유연성이 모색되어 왔다. 공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위해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파일공유가 불법복제로 강력히 처벌될 때, 다른 한편에서는 정보상품을 더 많이 공유하게 하면서도 이윤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모델이 ‘웹2.0’이나 ‘소셜 미디어’ 등의 이름으로 활발히 나타났다. 전자가 자유로운 공유지만 불법복제라면 후자는 통제받는 공유지만 합법복제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특성상 두 가지 복제 간의 경계는 뚜렷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복제가 곧 사업모델이 되기도 한다. 단적인 예로 구글이 약 1조 6천 5백 억 원을 주고 2006년에 인수한 온라인 비디오 공유 웹사이트 ‘유튜브’(Youtube)가 처음 시장에 나와 업계 1위로 가파르게 성장했던 것은 거기에 불법복제된 비디오가 넘쳐났기 때문이다.⁶ 또, 정보자본의 유연한 이윤창출을 위한 정보 생산수단은 곧 누구나 쉽게 잠재적 범죄자나

4 프레시안, “내가 기술유출범?...누명 쓰는 개발자들,” 2010.8.24

5 머니투데이, “국정원이 관리하는 '귀한' 기업들,” 2011.01.20

6 거대 미디어 기업 비아컴(Viacom)이 유튜브-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비아컴은 마케팅 업체를 통해 비밀리에 자신의 비디오를 불법복제해 유튜브에 올려왔다. The Official YouTube Blog, “Broadcast Yourself,” 2010.3.18

간첩이 될 수 있는 장비가 되고만다. 수많은 사무 노동자들이 기업의 기밀 자료나 자산 정보를 저도 모르게 ‘소셜 네트워크’에 거침없이 쏟아낼 지도 모를 일이다.⁷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사업도 더욱 성행하고 있다. 포털 서비스나 구글 검색을 이용하다가 혹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쓰면서 우리의 신상정보와 행적은 시시각각 유출되어 광고기업의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된다. 정부의 ‘시민 사찰’이나 기업의 인터넷 여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해 그리 첨단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⁸ 이런 상황에서 정보 공개인지 내부 고발인지, 정보 공유인지 기밀 유출인지, ‘위키백과’(Wikipedia)에 참여해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하고 있는 건지 ‘위키유출’(Wikileaks)에 접속해서 내부 문서를 방출하는 중인지 헷갈리는 상황, 이것이 대중이 간첩이 되는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기술문화적 현실이다.

그렇다 해도 어떻게 미국의 군사 기밀과 비밀 외교 문서가 그렇게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었는가? 이 역시 같은 현실에 근거해 있다. 2001년 9·11 사태 직후 구성된 9·11위원회는 정부기관 간의 협업의 부재, 특히 부처 간 정보 장벽 때문에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정망과 첩보망을 마치 인터넷의 ‘집단지성’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된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재구조화하도록 주문했다.⁹ 그 결과 미 국방성과 국무부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내부전산망 ‘시프르넷’(SIPRNet, The Secret Internet Protocol Router Network)이 만들어졌다. 전세계 270개국에 상주하는 미국의 외교관-간첩들이 본국으로 보낸 외교전문도 여기를 통했다. 이 내부전산망에는 무려 3백 만 명이 접속할 수 있었고 문제의 외교문서 유출 용의자로 지목된 브래들리 매닝(Bradley Manning) 일병도 그 중의 한 명이었을 뿐이다.¹⁰ 9·11위원회의 충고를 따른 국가 정보공유 체계는 위계적 국가 정보 시스템을 수평적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결시킨다는 정보자본주의사회의 또 다른 모순적 시도였고, 그 모순은 이렇게 또 다른 ‘9·11사태’로 폭발하고 만 것이다. 물론 위키유출의 외교전문 폭로를 두고 “세계 외교가의 9·11 사태”라고 하는 표현은 심한 과장인데, 내부고발자와 위키유출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국가 기밀을 대중을 향한 마지막 빗장을 열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보기관이나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 은행, 학교, 병원, 정부기관 모두 비슷한 처지에 있다. 펠릭스 스톨더(Felix Stalder)는 기밀로 분류된 정보라면 그 만큼 제한된 경계 내에서 흘러야 하지만 정보 가치를 높이고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작업 과정에서 어떤 것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보 유통의 경계를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밀 정보도 예외없이 대량의 정보처리 흐름에 내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 “폭로될만한 정보가 계속해서 과잉 공급”되고 있는 현실,¹¹ 곧 위키유출이 가능한 세계가 도래했다. 물론 위키유출과 같은 작업이 그저 흘러넘치는 정보를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제 위키유출이 해킹, 언론, 사회운동의 특정한 결합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인지 따져보자.

7 Brian Roddy, “[위키리크스로 보는 '기업이 직면한 5가지 무서운 진실'](#),” IDG, 2010.12.16

8 장여경, “[시민 사찰](#),” 참여사회, 2010.12

9 Felix Stalder, “[Contain This! Leaks, Whistle-Blowers and the Networked News Ecology](#),” Mute, 2010.11.4; The Guardian, “[WikiLeaks: the revolution has begun – and it will be digitised](#),” 2010.11.29

10 브래들리 매닝은 재판을 받지 못한 채(아무런 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7개월 넘게 독방에 갇혀 자살조차 못하게 5분마다 살아있음을 대답해야 하는 가혹한 인권 침해 상황에 처해있다. 경향신문, “[위키리크스에 문건 제공 '매닝 일병' 가혹한 옥살이](#),” 2010.12.21

11 Geert Lovink & Patrice Riemens, “[Twelve theses on WikiLeaks](#),” Eurozine, 2010.12.7; 위키유출이 지금까지 확보한 총 기밀 문서는 대략 1,200만 건에 달하고, 위키유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인 듯 하다. “우리는 막대한 양의 매우 수준 높은 내부고발자의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걸러내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모자랍니다.” Video on TED.com, “[Julian Assange: Why the world needs WikiLeaks](#),” 2010.7

2. 다른 해킹은 가능하다

어산지는 한 인터뷰에서 “해커 시절 ‘뚫고 들어간 컴퓨터 시스템을 망치지 않기,’ ‘정보를 변경하지 않기,’ ‘획득한 정보를 공유하기’ 등의 원칙”을 지켜온 해킹 활동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이런 해킹의 경험이 위키유출이 표방하는 권위의 부정, 정보 자유의 가치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왔다.¹² 아니, 해커는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 남의 정보(상품)를 훔쳐가는 못된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신용카드나 계좌정보를 빼내는 지능형 절도범이 아닌가? 종종 윤리적 해커나 정치적 해커가 있다는 소리도 나오지만, 대개 보안산업에 고용된 기술 노동자이거나 안보산업에 몸담고 있는 애국주의자 아니면 (일본과의 사이버 전쟁에나 출동하는) 민족주의자일 뿐이지 않는가. 그런데 2006년 말에 설립된 위키유출은 줄곧 전세계 텔레비전, 신문, 웹 상에 오르내리며 ‘다른 해킹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간첩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운다는 해커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키유출은 소속 해커들이 국가 정보 네트워크에 침입해 기밀 정보를 빼내는 식이 아니다. 위키유출의 해킹은 거대 조직의 부정권력의 작동을 고발하려는 내부자가 그 내부 기밀을 익명으로 유출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와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다. 위키유출은 지배적 정보기술을 재개발하고 재활용해서 검열을 우회하고 내부고발자 추적을 막을 수 있는 익명화와 암호화 기술을 시민운동에 접목하는 해킹행동주의의 한 갈래다. 이는 1960년대 이래 정보자유, 검열 반대와 표현의 자유, 투명성과 정보공개,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보기술을 혁신해온 해커와 이용자 공동체의 자율적 정보기술운동의 전통 위에서 가능했다.¹³ 하지만 위키유출은 그 해킹문화 전통을 넘어 더 나아갔다.

우선, 위키유출은 해킹행동주의를 더 밀고 나가 “수퍼권력을 해킹하기”에 이르렀다.¹⁴ 감시자를 감시하는 역감시(counter-surveillance)가 그것이다. 어떻게 한 것인가? 권력은 사회 통제와 권력 유지를 위해 오랜 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간첩 활동(검열, 사찰)을 해왔고, 정보·지식 노동에 대한 통제와 정보상품의 유통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도 감시는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 파고들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으레 그렇듯 일방적이지만은 않은데, 앞서 유연한 통제 기제로 등장했다던 웹2.0이나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더불어 감시기술이 대중화된 덕분에 시민은 감시당하고만 있지 않고 감시에 참여하고 있다. 감시 기술의 대중화 혹은 민주화는 권력이 발전시켜온 네트워크된 감시 기술 문화가 낳은 하나의 역설적인 결과다. 마치 우리의 인터넷이 냉전 초기 군산학복합체의 부산물로 시작되었듯이.

감시기술의 대중화는 대체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감시자를 닮는 자기감시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감시자에 그 감시의 시선을 되돌리는 역감시의 양상이다. 전자는 지배적 감시의 주체가 거대 조직에서 개인 차원으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네티즌 수사대’나 ‘인터넷 자경단’의 형태로 ‘사이버 마녀사냥’이나 ‘사이버 집단괴롭힘’을 벌인다고 비난받는 일들이 여기에 속한다. 감시자본주의를 본질로 하는 웹2.0의 참여가 곧 대중의 지배적 감시 기술에 대한 참여로도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신상털기’란 그저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사용하기만 해도 된다. 감시기술의 대중화는 또한 감시자를 감시하는 역감시도 가능하게 만든다. 2008년 촛불시위에서 ‘창조적 집단지성’으로 주목받은 여러 사례들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¹⁵ 위키유출도 대중간첩시대에 감시기술의 대중화에 힘입어 등장한 것이다. ‘네티즌

12 Forbes, “An Interview With WikiLeaks’ Julian Assange,” 2010.11.29; 한겨레21, “메시아인가, 무분별한 철부지인가,” 2010.12.10

13 조동원, “해킹의 문화정치에서 해킹문화운동으로,” 문화/과학, 2009년 가을; 조동원, “위키유출(wikileaks): 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인권오름, 2010.08.18

14 Bruce Sterling, 같은 글

15 양쪽 다 네트워크된 정보기술을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 환호를 받기도 하고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두 가지 모두 온라인 대중 난동으로 보는 입장(조선일보 등)도 있다. 허지웅, “인터넷 ‘자경

수사대' 같은 일반 이용자보다는 해킹 활동가들이 나서서 지배적 자기감시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역감시에 초점을 맞춰 기획한 역감시 기술의 해킹이다.¹⁶ 위키유출 웹사이트에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보기관’이 될 것”이라고 나와있듯이,¹⁷ 대중간첩시대에 권력의 중앙집중화된 기구로만 존재해온 정보기관 시장에 감시자를 감시하는 민간의 정보기관도 하나쯤 등장할 때가 된 것이다.

위키유출이 해킹을 넘어선 해킹을 벌인 또 다른 측면은 투명성과 익명성의 개념을 재구성한 데 있다. 넓게 보면 정보공개운동의 일환이지만, 위키유출은 입법 청원이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정보공개운동의 방식과 다르다. 기존의 그런 운동 방식을 해킹한 것이다. 이는 사로지 지리(Saroj Giri)가 지적하듯이, 권력이 사실상 허용해온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서 “지금껏 해오던 대로 권력에 도전하지 않고, 바로 그 도전 방식에 도전하면서 권력에 도전했다”는 차원이다. 그런 탓인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나 국경없는기자회도 위키유출을 환영하기보다는 비난했다.¹⁸

그런 도전 방식은 정보정치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의치는 소수자에게 익명성이 생명이었던만큼 권력은 실명제를 통한 검열 장치를 강화해오면서 투명한 소통과 투명한 거래를 위해 명예훼손이나 사이버모욕, 집단괴롭힘,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는 익명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득해왔다. 투명성과 익명성이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님에도 서로 상충된다는 식이었다. 정부든 기업이든 군대든 은행이든 투명한 소통과 거래를 원한다던 권력 자체는 그러나 내부 검열을 통해 조직 외부에 불투명했고, 마치 개인인양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익명으로 작동해왔다. 수감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원형감옥인 ‘파놉티콘’(Panopticon)의 중앙에 위치한 감시자는 어둠 속에서 익명(혹은 부재)의 힘을 누려왔다. 그러나 위키유출은 그런 개념 놀이에 중립적인 타협안을 내는 식이 아니라 그 논리 구도 자체를 뒤집어버렸다. 내부고발자는 익명으로 보호하고 권력에는 실명을 되썩우며 감시의 시선을 반사시켜 파놉티콘의 감시자에 그 시선을 되썩우는 것이다. 즉, 불투명한 권력의 작동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위키유출은 내부고발자가 권력의 감시와 검열의 경계를 넘어 안심하고 외부로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익명화 접속 장치를 제공하며, 외부에서 내부로의 과감한 개입(혹은 권력 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감행한 것이다.¹⁹

이와 같이, 위키유출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새롭게 선보인 해킹행동주의는 권력의 작동 방식을 교란하고, 그 권력 작동 방식 안에 이미 정해진 대항의 경로도 거치지 않으면서, 무엇과 누구를 위한 투명성과 익명성 인가를 재규정하는, 역감시 기술과 개념의 해킹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위키유출은 역감시가 갖는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기도 했다. 감시자가 감시당하고 파놉티콘이 일방성에서 쌍방향성의 경합적인 공간으로 변형되더라도 그 감시-피감시 관계의 권력 구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감시기술의 대중화 덕분에 권력에 대해 역감시를 하게 된 주체가 스스로 기존의 권력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그 역능을 사용할

단'의 시대,” 시사NLive, 2010.10.30

16 이와 반대의 사례로 정부의 인터넷 감시 활동을 돕는, 그 이름도 '비질란트'(Vigilant) 프로젝트라고 하는 600여 명의 자발적 해커 집단이 있다. Glenn Greenwald, “[Project Vigilant and the government/corporate destruction of privacy,](#)” Salon.com, 2010.8.2; 보안뉴스, “[美 민간 사이버보안 자원봉사...한국도 벤치마킹 필요!](#)” 2010.8.2

17 [Wikileaks.org \(WikiLeaks>About/ko\)](#) 2010년 8월 접속

18 Saroj Giri, “[WikiLeaks beyond WikiLeaks,](#)” Mute, 2010.12.16; Slavoj Žižek, “[Good Manners in the Age of WikiLeaks,](#)” London Review of Books, 2011.1.20

19 내부고발 혹은 제보에 있어서 익명성의 보장이 결정적인 조건이지만 국내의 관련 제도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및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 있지만, “권익위나 수사기관, 감사원 등 관련 공공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했을 경우만 보호”한다. 또 주류 “언론사에 제보했을 경우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지문, “[‘양심의 호루라기’ 지키는 언론 없습니까?](#)” 미디어오늘, 2010.12.30

수도 있다. 실제로 위키유출의 조직 운영에서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 그것이 지향하는 지구적 다중 네트워크에 기초한 정보의 생산과 확산 모델과는 반대로, 그러나 주류 언론의 간첩/영웅 서사에는 잘 부합되게도, 위키유출은 그 활동의 기획, 결정, 집행이 실상 즐리안 어산지라는 일 개인에 집중된 1인 중심 조직으로 유지되어 왔다.²⁰ 위에서 보겠지만 몇몇의 지배적 주류 언론과 함께 협력하는 폭로 전술도 기존 권력에 의존하면서 그 구조를 강화시키는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또, 위키유출이 가진 내부고발 지원 기술의 탁월함은 바로 그 존재가 증명하고 있지만, 유출된 문서의 검증을 위해 자원한 수백 명의 분석가들과 운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위키 방식의 구현은 사실 그 진위를 알 수 없다. 위키유출 기술의 중앙집중화된 설계와 운영 그리고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문제가 그런 의구심을 더한다.²¹ 이런 경향은 해커문화 전통이 가진 능력주의나 엘리트주의적 태도와 짝을 이루며 위키유출의 잠재적 협력자들을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²²

3. “과학적 언론,” 혹은 주류 언론과의 거래

주류 언론은 국가 안보를 구실로 혹은 정언유착의 관계 속에서 정보 유출의 제약을 받는 반면, 위키유출은 “인터넷의 논리에 따라 정보를 유출한다.”²³ 그래서 제이 로젠(Jay Rosen)은 위키유출을 “세계 최초의 국가없는 뉴스 조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러한 진단은 일면적인데 위키유출이 뉴스의 원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유통에 있어서는 점점 기존의 주류 언론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키유출을 주류 언론과 대안 미디어의 되섞기(remix 혹은 미디어 융합)의 한 모델로 볼만하다. 포스트포드주의의 인터넷 판본이기도 한 웹2.0과 소셜 미디어의 주류 네트워크문화에 발맞춰 위키유출은 뉴스의 생산에서 ‘위키위키’(wikiwiki)²⁴ 방식을 표방하며 뉴스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엄격한 노동분업 구조를 벗어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그 뉴스의 유통에 있어서는 마치 국제 통신사처럼 여러 주류 언론 기업들과 제휴하면서 동시-대량의 과급력을 보존하고 있는 주류 언론의 지배적인 정보 유통 구조를 심분 활용하고 있다. 어산지가 말하는 “과학적 언론”(Scientific Journalism)도 이런 되섞기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위키유출은 단지 객관성이 아니라 과학이다. 위키유출은 새 유형의 언론을 생성하는데, 그것은 과학적 언론이다: 우리는 다른 미디어 출구와 함께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뉴스를 제공하면서 또 또한 그것이 진짜인지 검증한다. 과학적 언론은 당신이 뉴스 이야기를 읽고, 그런 후 온라인에서 클릭해 그것의 출처인 원본 문서를 볼 수 있게 한다. 그런 방식으로 당신은 이 기사가 진짜인가, 기자의 보도가 정확했는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²⁵

20 Geert Lovink & Patrice Riemens, 같은 글; Felix Stalder, 같은 글; Gabriella Coleman, “[Hacker Culture: A Response to Bruce Sterling on WikiLeaks](#),” The Atlantic, 2010.12.23

21 3년동안 위키유출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다니엘 슈미트(Daniel Schmitt)는 엄청난 유출 정보가 단 하나의 내부고발 사이트에 집중되고 병목되는 한계와 어산지의 권위주의적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2010년 10월경 다른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위키유출을 나와 탈중심화된 내부고발 웹사이트로서 ‘열린유출’(http://openleaks.org)을 준비하고 있다.

22 Geert Lovink & Patrice Riemens, 같은 글

23 Jay Rosen, “[The Afghanistan War Logs Released by Wikileaks, the World's First Stateless News Organization](#),” PressThink, 2010.7.26

24 그냥 ‘위키’라고 줄여 쓰기도 하는데, 이는 하와이 선주민 언어로 ‘빨리 빨리’라는 뜻이다.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적용되면서 텍스트 생산의 근대 자본주의적 노동분업(저자 - 편집자 - 독자) 구조를 따르지 않는 열린 출판(open publishing) 방식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누구나 바로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 때 ‘위키’(빨리)는 시간의 문제라기보다는 텍스트 생산의 분업 구조를 극복한 직접성의 관계의 문제이다. 누구나 직접 쓰고 편집하고 읽는다는 것이다.

25 Julian Assange, “[Dont' Shoot the Messenger for revealing uncomfortable truths](#),” The Australian, 2010.12.8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만이 아니라 연구 방법과 분석 대상이 된 원천 데이터를 함께 공개하여 그 과학성을 표방하듯이 뉴스에 있어서도 고도로 편집된 요약 기사를 제시하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원천 정보를 함께 공개한다는 것이다.²⁶ 이 때 위키유출은 원천 정보의 제공 자체(내부 기밀 문서의 폭로)보다 이를 통해 수용자가 뉴스의 의미화 실천에 적극 개입하도록 초대되는 뉴스 생산 방식의 탈중심화 기획으로 보인다. 기존 언론의 범주를 넘어서려는 위키유출의 정보정치적 잠재력은 여기서 발생한다. 우선 기존의 언론은 (주요 뉴스 원천이자 광고주인 정부와 기업) 권력이 공식적으로 유출(공개)하는 정보나 비공식적인 유착 관계 속에서 유출되는 정보에 의존하는 반면, 위키유출은 “그 권력의 규칙을 위반하는 독립적 유출을 특화했다.”²⁷ 그렇게 되자 주류 언론이 확보한 정보로 구성하는 진실성은 권력과 언론 간의 상호 협력과 지배력의 보존을 위한 타협의 결과인 반면, 위키유출의 경우 그 기획상으로는 위키유출 자체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실성은 그 권력에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까지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주류 언론의 편집 과정에 동반되는 (알아서 다해주는) 검열과 같은 것이 위키유출에서는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를 선별하는 과정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또, 지금까지 정보 유출이 주로 주류 언론이 대중을 위해 매개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키유출은 내부고발을 통한 정보 유출이나 유출된 정보의 해석에 있어서 대중이 직접 뉴스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주류 언론이 매개되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위키유출의 이런 기획과 접근이 함축한 급진적 정보정치적 잠재력은 결과적으로 잠재적인 것에 그쳤다.

위키유출이 언론을 넘어서는 언론으로서 위키 방식을 충분히 급진화하지 못한 것은 주류 언론과의 제휴 관계에서 드러난다. 원천 정보 전체를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위키유출은 사회적 파장을 최대화할 수 있으면서 공인된 신뢰성을 가진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기성의 주류 언론에 접근해 협상했다. 이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우선 정보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표방한 위키유출이 내부고발로 유출된 정보를 널리 공개할 때는 정보 독점과 통제의 방식을 택한 꼴이다. 위키유출이 특히 5개 대형 신문 기업과 교정(redactions) 과정을 협력하면서 유출된 정보를 선별해서 출판하는 배타적 권리를 그것들에 부여한 것은 스스로 정보 자유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해커철학을 등진 것이나 다름없다.²⁸ 애초에 위키위키 혹은 공동체의 참여 방식을 표방했음에도 주류 언론과 손맞고 점차 초대형 사건을 만드는 선정적 폭로 중심의 “거대유출”²⁹로 기울어진 것이다. 어산지가 세계 유수의 주류 언론사들과 함께 폭로할 문서를 편집하고 기자회견을 열면서 적극 채택한 스펙타클 효과는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듯 하다. 지리(Giri)가 지적하듯이, 권력이 마치 이러저러한 정부기관이나 기업 조직의 최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몇몇 권력자들에게 있고, 그들은 대중에게 진실을 숨기거나 조작하면서 권력을 유지해나가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³⁰ 그런 사고틀에는 “지배 권력과는 그것이 숨기고 있는 진실의 극적인 폭로를 통해서 싸울 수 있다”는 태도도 포함된다. 이는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이 지적하는 “미국 국무부라고 하는 ‘나쁜’ 비밀집단을 공격하는 ‘좋은’ 비밀집단이라는 위키유출의 음모적 양식”³¹과 짝을 이룬다.

이와 같이 위키유출이 기획하고 주류 언론이 연출하여 재현하고 있는 지배 권력과의 투쟁 서사시는 그러나 (런던에서, 어산지가 체포되던 때도 그와 상관없이 진행된 등록금 인상 반대) 학생 시위나 세계 각 곳의

26 Felix Stalder, 같은 글

27 Felix Stalder, 같은 글

28 Saroj Giri, 같은 글

29 현재 아이슬란드 국회의원이며 시인이자 반전운동가로 위키유출에 참여해온 브리기타 온스도티르(Birgitta Jónsdóttir)는 위키유출이 유출된 정보를 다양한 풀뿌리 조직, 캠페인, 지역 운동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의 독점적 통제와 주류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미디어 스펙타클 만들기에 경도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거대유출”(megaleaks) 혹은 “대량유출”(massive leaks)이라는 표현을 썼다. CBCradio The Current, “[The Man Behind WikiLeaks, Julian Assange.](#)” 2010.12.6

30 Saroj Giri, 같은 글

31 Slavoj Žižek, 같은 글

노동자 투쟁과 연대할 여지를 두지 않는 듯하다.³² 그렇다면 위키유출이 주류 언론과 거래하며 채택한 폭로형 정보 스펙타클을 전 세계가 대량 소비하는 와중에 우리는 언론의 자유나 알권리조차 그런 스펙타클의 형태로 소비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른다. 위키유출은 저 상층부의 ‘권력’에 대항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때에도 시민과의 연결은 끊어져 있기 때문이다.³³ 그래서 위키유출이 ‘혁명의 언론’이라거나 기존 언론의 역할을 반성하게 했다는 반응들에서도 여전히 알권리나 언론의 자유는 공동체의 결사나 사회 투쟁 과정에 결부되는 권리 개념이라기보다 대중에는 은폐돼온 권력 내부의 어떤 진실을 적극 알려내는 위키유출과 같은 언론 조직이 누려야 할 자유 개념에 머물러 있다.³⁴ 이에 더해 주류 언론과 위키유출의 제휴 관계와 협력 과정은 물론 의도된 것이 아니더라도, 언론 기업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적용하는 그 원천 정보의 외주생산 방식에 들어맞는 것이기도 하다. 즉, 언론 기업이 져야 했을 법적 책임이나 위험을 위키유출이 감수하고 이들 언론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폭로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⁵ 이런 차원에서 위키유출이 탐사보도 형태의 언론이라거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구도 설정은 위키유출에 대한 탄압에 맞선 방어 논리이기도 하지만 주류 언론 기업들의 알리바이를 위해 혹은 부수적 혜택을 위해 동원된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한계들이 드러나면서 다니엘 슈미트와 브리기타 온스도티르를 비롯한 위키유출의 일부 자원 활동가들은 위키유출이 대량 폭로와 미디어 이벤트로 가는 방식을 비판하며 2010년 11월 외교전문의 폭로가 준비되는 시점에서 위키유출을 떠났다.

4. 위키유출 이후의 정보정치

위키유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요동친 정보정치는 어떻게 변모해 갈 것인가? 겉으로 드러난 쇼만 가지고는 위키유출이 가한 충격이 실제로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야 할 권력에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보안·감시의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전술적 투명성이다. 쉽게 예상되는 바, 위키유출 사태를 계기로 더욱 은밀하고 강화된 정보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다. 미국의 정치가들과 고위관료들은 위키유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것이 외교관이나 첩보원을 위협에 처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조차 실제로 9만 여 건의 ‘아프간 전쟁 일지’ 공개 때문에 미국 첩보원이나 미군, 아프간의 협력자들이 위협을 당하거나 살해당한 일이 없었다고 인정했다.³⁶ 그런데 과장해서 위키유출을 몰아대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키유출이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이 웹사이트를 폐쇄시키고 정보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온갖 조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또 하나의) 거짓말이라는 점을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³⁷ 이와 같이, 위키유출이 폭로했거나 확보하

32 Saroj Giri, 같은 글

33 Saroj Giri, 같은 글

34 어사취 자신이나 위키유출을 옹호하는 측에서 그 활동이 언론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인용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만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함께 집회 및 청원의 권리를 함께 명시하고 있다. 한 해커의 해석에 따르면, 종교나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가 없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신념(종교)과 표현(언론)은 결사(연합)의 사례일 뿐이다(James Vasile, "[Hack the System](#)," Hacker Visions, 2009.7.27). 즉, 공동체의 결사를 위해 그 표현(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권력이 표현이나 발언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를 통해 공동체가 결사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언론)의 자유는 특정한 언론 조직의 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선언될 때도 공동체의 결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35 Felix Stalder, 같은 글

36 Slashdot, "[DoD Study Contradicts Charges Against WikiLeaks](#)," 2010.10.17

37 Reuters, "[U.S. officials privately say WikiLeaks damage limited](#)," 2011.1.18; Techdirt, "[US Government Officials Admit](#)

고 있는 문서들이 그렇게 국가 기밀도 아닐 뿐더러 알려진다고 해서 별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반면, 기밀 유출과 내부고발과 불법복제 등의 끊임없는 정보 유출을 더욱 옥죄고 막아서야 하는 상황에서 위키유출은 좋은 구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상품이 가진 모순의 진정한 해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하고 공유하여 참여하면서도 더욱 통제받고 감시당하는 정보문화로 향해가고 있다. 결국 대중간첩시대란 네티즌 수사대 등의 대중간첩 활동에 사명감을 갖고 자원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누구나 쉽게 내부고발자나 정보유출자로 의심받으며 신고당할 수 있는 엄혹한 디지털 네트워크 정보사회를 말한다.

다른 한편, 보안·감시를 강화하면서도, 영국의 정보위원회 위원이 “탄압하지 말고 정부[가] 더 많은 개방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어책”³⁸이라고 충고한 것처럼 공개를 통해 숨기는 방식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앞서 위키유출의 더 나아간 해킹행동주의에서도 보았듯이 “[권력과 자본이] 숨어서 과시하는 힘”을 “[위키유출이] 드러냄으로써 숨는 힘”으로 제압한 것처럼 보이지만,³⁹ 사실상 “드러냄으로써 숨는 힘”은 위키유출의 새로운 전술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본주의 문화의 일단이다.⁴⁰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어산지는 위키유출이 투명하고 완전한 시장을 위해, “보다 자유롭고 윤리적인 자본주의를 위해 디자인되었다”⁴¹고 밝혔다. 투명한 자본주의가 착취와 수탈이 없는 자본의 축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적인 정부가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벗어던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위키유출의 기획은 모순적이지 않다. 오히려 투명성은 “자본주의의 민주화”⁴² 혹은 “신자유주의적 윤리로서의 정의”⁴³의 핵심 요소가 되어왔다. 위키유출의 위협을 무릅쓴 폭로형 정보공개운동은 신자유주의 이전의 낡은 생산관계를 더욱 과감하게 개혁하는데 일조하는 일로 귀결될 지 모른다. 지난 20여 년간 주류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본의 운동을 윤리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벌인 ‘정보공개’나 ‘소액주주운동’이 결과적으로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처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위키유출 사태가 계속 될수록 투명한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위한 기획이 고민거리다. 우선 (그에 대한 주류 언론의 지배 서사에 맞서면서) 위키유출을 죽이거나 (그 급진적 잠재력을 구해내면서) 위키유출을 살리거나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고민의 와중에, 풀뿌리 기술문화가 발전시켜온 인터넷의 기술과 자원을 전유하며 통제하고 있는 기업들이 연달아 위키유출의 급진적 정보정치의 흐름을 끊어낼 때, 마스터카드, 비자, 페이팔, 스위스은행, 아메리카은행 등이 줄줄이 위키유출의 돈줄을 끊으며 태업을 벌일 때, 비로소 비밀 외교 문서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편재된 권력의 실체가 명확히 노출되었다.⁴⁴ 권력이 마치 특정한 권력자에게만 존재한다는 생각, 부패에 연루된 몇몇 관료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다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도 깨뜨렸다. 그와 동시에 위키유출의 급진적 잠재력을 살려내는, 그래서 아마도 포스트-위키유출의 급진적 정보운동을 위한 새로운 실험과 시도들이 그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에 맞서는 저항에서 나타났다. 위키유출이 폭로한 문서 안의 진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키유출의 기획과 감행, 그 자체가 촉발시킨 연쇄적 과정, 탄압과 그에 맞선 저항, 연대와 대안의 모색 등에서 말이다.⁴⁵ 적어도 인터넷에서는 그야

[That They Lied About Actual Impact Of Wikileaks To Bolster Legal Effort](#),” 2011.1.19

38 The Guardian, “[Ministers must 'wise up not clam up' after WikiLeaks disclosures](#),” 2010.12.30

39 고병권, “[세상 모두로 하여금 그저 알게 하라](#),” Weekly 수유너머, 2011.1.4

40 Pavlos Hatzopoulos, “[3+1 notes on wikileaks](#),” Re-public, 2010.12.12

41 Forbes, 같은 글

42 Slavoj Žižek, 같은 글

43 서동진, “[이 윤리적인 사회를 보라: 신자유주의적 윤리로서의 정의](#)”(정의란 무엇인가 비판] 책 기고글), 몽상의 殿堂, 2010.12.16

44 Saroj Giri, 같은 글; Slavoj Žižek, 같은 글

45 조동원, “[수많은 위키유출\(Wikileaks\)들과 '대안 인터넷'](#),” 인권오름, 2011.1.26

말로 ‘다른 인터넷은 가능하다’는 것을 실행하기 위한 풀뿌리 기술문화운동의 재결집이 시작되는 듯하다.
⁴⁶ 권력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도 기밀의 폭로나 그로 인한 ‘외교적 갈등’ 같은 것이 아니라, 또 각 개인의 표현이나 앎 자체가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게 될 때의 저항과 대안을 위한 자율적 결사와 연합의 조직화인 것이다.

조동원

정보운동/문화연구 | dongwon@riseup.net

46 Glyn Moody, "[Lessons from WikiLeaks: decentralize, decentralize, decentralize.](#)" The H Open Source, 2010.12.21